

‘대수도론’ 절대 안된다

③ 이유있는 지방의 반발

“非수도권 경제기반 붕괴”

‘대수도론’에 대해 광주와 전남도가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강원 등 다른 지역 지자체들도 조직적으로 권역별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 수도 만들기’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종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비 수도권 자치단체의 연대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대 수도론’을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이처럼 ‘대 수도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여파로 지방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가운데 또다시 서울·인천·경기가 대수도로 통합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균형발전에 역행...분열·갈등만 조장 경제계·정치권 등 비난 목소리 확산

당선자들이 수도권 대통합을 부르짖는 것은 심각한 국력 낭비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대립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도 지자체가 ‘대 수도론’을 반대하는 이유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22일 ‘수도권이 뿔뿔 뿔쳐 수도권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자고 나선 것은 광주를 비롯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 달래기 차원에서 허용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여파가 영호남 등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위축 등으로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 수도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만 잘살아보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최승식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 수도론’을 거론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은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광주 상공회의소, 광주·전남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등 광주지역 경제단체도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집중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덕에 광주는 삼성전자 백색가전라인, 첨단 광산업체가 잇따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수도론’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도 22일 부

산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지방경제의 막대한 위축과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대 수도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위해 다른 광역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성호 대전시장 당선자, 이완구 충남지사 당선자, 정우택 충북지사 당선자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 수도론’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호 조경태 의원 등 영남 출신 의원 8명은 22일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 인천, 경기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내세운 ‘대 수도론’ 구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 수도론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이 22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사학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단돈으로 땅사고 빚 갚고 공사비 부풀려 비자금 조성

■ 전모 드러난 사학비리 백태

그동안 떠돌던 사학 비리에 대한 소문은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이사장이나 일가는 법인 돈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했고, 직원들까지 각종 비리에 개입해 자금을 빼돌렸으며 감독기관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 행위로 서슴지 않았다.

◇재단 돈은 내 돈=지방의 K대 설립자인 이사장 C씨는 지난 99년 이후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 집행잔액을 예결산에 잡지 않는 장부의 계좌로 관리, 45억원을 조성했다. 그는 이 돈을 부인인 학장과 아들인 기호조성실장 계좌로 빼돌려 10억원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서울시내 E학원의 이사장 K씨는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에 매각,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K씨는 지난 2003년 7월 K시 소재 임야 53만㎡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76억원에 매입,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뒤 이사회 및 관할교육청 등에 해당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숨긴 채 학원 명의로 경매에 응해 94억원에 낙찰 받는 방식으로 94억원을 챙기는 편법(배임 혐의)까지 동원했다.

◇공사나 물품구입은 비자금의 보고=전북 소재 S대학의 경우 지난 2002~2005년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사에 366억원을 지급했으나, 여기에는 실제

로 시공하지 않은 부지조성 비용 등 65억원이 허위로 포함됐다. 게다가 H건설은 주주액 366억원 중 53억원만 매출로 신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5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H건설은 이 대학 설립자 L씨의 처와 매제 등이 주주다.

D중학교는 19억원 짜리 학교 이전 공사를 Y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H씨가 1억원, H씨의 조카인 I씨가 1억3천500만원을 받아 쟁했다. 이사장 H씨는 학교법인의 정기예금 4천600만원을 인출, 이 중 3천만원만을 카드대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단 돈으로 각종 편·불법=모 학원의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H물산이 소유한 K군 K읍 일대 임야 등 6만8천㎡를 매입, 고교 설립을 추진하려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관할교육청의 학교설립 승인에 제동이 걸리자 공무원 위조 수단을 동원했다.

서울 소재 K대학은 지난 2002년 교지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상 수익사업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설계작업을 맡았던 용역업체인 S사 직원 P씨가 문화관광부에 대한 인터넷 질의 및 회신을 위조, E시 D면 일대 16만㎡ 규모의 자연녹지내 스포츠 시설 개발을 성사시켰다.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4억원은 보험회계 수수료로 날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양자대화” “6자회담”

北·美 ‘미사일 해결’ 협상 형식 기싸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북미 양측간 기싸움이 다시 양자대화나 6자회담이라는 협상의 형식문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오랜 침묵을 깨고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보도 등을 통해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선(先) 6자 회담 북극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치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반년 가까이 양자협상이나 다자협상이냐를 두고 북미 양측이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던 양상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북한은 왜 이처럼 미국이 한결같이 거부의를 밝혀 왔던 양자협상에 집착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미국과의 양자담판을 통해 얻을 파이가 더 클 수 있

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 미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해 비밀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대 고유한 교수는 22일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도 다시 한번 북미 양자협상을 요구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북한의 양자협상 요구가 결국 6자회담으로 가기위한 징검다리일 것이라는 관측과도 맥을 통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포동 2호



최근 한반도에 북한의 미사일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태시 주미한국대사(오른쪽)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청와대 한미재계회의의 대표단 접견에 나란히 참석, 고인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사일 발사를 카드로 사용했고, 이를 북미협상의 초대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도 부시 행정부의 완강한 거부 의사를 예상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거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미간 대화 형식을 둔 기싸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내달

한·중·일 3국 방문까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북한은 라이스 장관의 방문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의 수순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거나 미국을 북한과의 양자대화 장으로 끌어들이게 할 중국이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사학법 대치...여야 정책협의회 무산 한나라 “민생법안과 연계”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 처리 연계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후 열린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 관련 조항 등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여야정책협

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사정 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입법 및 상임위 활동 모두 한나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부담이 있는데다 열린우리당도 핵심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어느정도 합의점 도출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6월 임시국회의 짧은 일정을 감안하면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solar water heater. The headline reads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전조기' (Solar water heater using only electricity).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such as being a '최고의 유압전조기' (Best hydraulic water heater) and having a '유압전조기' (Hydraulic water heater) technology.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주유 알' (Juyou Al) and a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Sony products. The headline reads '최신 출시된 SONY의 명품들...' (Newly released Sony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Sony products, including a Bravia TV, a digital camcorder, and a digital still camera. The ad lists the prices of these product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소니 광주친시간매장' (Sony Gwangju Friends Time Store) and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Sony Official Service Center).